 금융위원회	<b>보 도 자 료</b>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b>보도</b>	<b>2017.3.7.(화) 조간부터</b>	<b>배포</b>	<b>2017.3.6(월)</b>	
<b>책 임 자</b>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 신 진 창(02-2100-2990)	<b>담 당 자</b>	양 병 권 사무관 (02-2100-2992)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02-2100-2610)		전 동 연 사무관 (02-2100-2614)		
	예금보험공사 채권관리부장 이 병 재(02-758-0801)		김 시 승 팀 장 (02-758-0807)		
	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장 조 생 현(051-663-8181)		서 정 훈 팀 장 (051-663-8182)		
	자산관리공사 종합기획부장 이 중 국(051-794-3030)		한 덕 규 팀 장 (051-794-3040)		
	신용보증기금 채권관리부장 이 강 근(053-430-4411)		광 영 남 팀 장 (053-430-4412)		
	기술보증기금 회생관리부장 문 경 주(051-606-7480)		박 문 수 부부장 (051-606-748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업무부장 이 남 진(02-2080-6650)		김 진 환 팀 장 (02-2080-6630)		

## 제 목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무자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 개최

- ◆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대손상각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인 캄코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
- ◆ 채무조정, 추심회수, 시효관리 등 관리 과정별로 각 기관이  
운용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을 강화
- ◆ 채권관리 직원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실적 성과 반영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과 통합 통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병행

## 1. 간담회 개요

- '17.3.6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동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함

###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7.3.6(月) 10:00~11:00 /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10명)  
- 금융위 부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상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금융연구원 구정환 박사

##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정부는 그동안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채무자에 대한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 이러한 제도개선은 민간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1) 부실채권은 단순히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  
2) 단기적인 회수실적 증대 못지않게,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중요  
3)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별적인 채무조정이나 채권관리 보다는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현재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은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에 미흡하고, 관리상 비효율도 적지 않음

- ① 회수가능성 없는 경우에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
- ② 경직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
- ③ 기관별 제도차로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이 어렵고, 형평성 저해

□ 이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① 상각기준을 정비하여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 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
  - ② 채무조정, 추심회수, 시효관리 등 관리 과정별로 각 기관이 도입·운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을 강화
  - ③ 채권관리 직원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성과 반영,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 병행
- ➡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에 기여하는 한편, 각 기관은 업무중복 비효율을 제거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며,

- 특히, 핵심 과제인 상각채권 일원화 관리는 금융공공기관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 정부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 3.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 가. 추진배경

□ (현황)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가계+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16년말 현재 약 25조원이며,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

- 대부분 무담보채권이며, 상각된 채권은 11.2조원(비중 : 45%)

\* 은행권(부실채권 중 상각채권 비중 77%)에 비해 상각채권 비중 낮음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조원, 만명, '16년말)>

	보증				매입		합계
	주금공	신보	기보	농신보	캠코	예보(KR&C)	
부실채권	2.2	3.1	1.0	5.3	10.9	2.3	24.9
채무자	12.8	8.0	1.0	11.9	14.4	23.7	71.8

□ (문제점)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이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에 미흡하고, 관리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

- ① 모호한 상각기준으로 인해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기에 상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

\* (은행) 연체후 1년내 상각 (금융공공기관) 기관별로 상각에 3~10년 이상 소요

→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 되고, 채권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는 등 비효율 야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상각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안됨

- ②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있으나,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극적·경직적 운용 등으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

- 취약계층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

\* 소멸시효(5년) 도래시 소송 등을 통해 10년 연장 → 15년 이상 지속 추심

- ③ 다중채무자의 경우, 기관별로 관리제도와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와 기관간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 나. 개선방안 주요내용

### 1. 상각기준 정비 및 상각채권 일원화 관리

□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의 적기 정리를 지원하여 부실채권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실효성을 제고

#### ① 모호하고 추상적인 상각기준을 공적기관 취지에 맞게 구체화

✓ (원칙) 회수 불가능, 회수실익 없는 경우 등(현재 구체적 기준 없음)

➔ 대위변제 또는 채권매입후 1년 이상 경과 등 구체적 기준 추가

✓ (예외)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 既 채무조정 약정 체결 등

※ 각 기관이 보유한 채권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기준 조정

#### ② 상각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캠프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

※ 농신보 상각채권은 채권특성 등을 감안하여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하는 방안 검토

▼ (매각대상)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신·기보, 주금공, 예보) 보유 “개인 상각채권” (금융공공기관들은 “특수채권”으로 분류)

▼ (매각방식) ①보유중인 상각채권은 '17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②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은 연 1회 정기 매각

▼ (매각가) ‘잔여이익 배분 확정가방식’ 활용 → 초과회수 이익 공유

\* 평가기관(회계법인) 가치평가 후 매각가 산정 → 초과회수시 일정비율로 이익 공유

### 2. 부실채권 관리 모범사례 발굴·공유

※ 공공기관이 법상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소득정보 조회 권한을 활용하여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

① 채무조정 :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하여 기관 자율의 채무조정 기능을 보다 활성화

#### ① (절차) 제도 안내 의무화 및 온라인신청 채널 구축 (캠코 예)

- 취약계층의 소액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 (기간단축, 제출서류 간소화)를 도입 (예보 예)

② (내용) 원리금감면 관련 제도 개선,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 (최장 10년 내외) 등 채무조정 내용 강화 (예보·캠코·주금공 예)

③ (기타) 사고·실직 등으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도입·강화하고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캠코 예\*)

\* 최장 2년 유예(예외적으로 최장 3년 또는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유예)

- 신복위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보증기관에도 확대 적용

\* 신복위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가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

② 추심회수 :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변제의욕을 고취

① 외부 위탁시 추심회사가 불법·과잉추심하지 않도록 위임기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체계도 정비 (캠코 예\*)

\* 위탁기관의 과잉 추심행위에 대해 수수료 지급 및 중간평가시 페널티 부여

②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원금부터 우선 변제하도록 충당순서 변경

- ③ **시효관리** :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캠코 例\*),  
시효 완성시에는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안내 (예보 例)  
 \* 2백만원 이하, 70세 이상인 경우 시효연장 안함 →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상 확대 계획

### 3. 인센티브 구조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① **인센티브 구조 개선** : 채권 회수·관리에 대한 직원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 채무조정 노력을 성과에 반영  
 \* 적극적인 채무조정 업무수행이나 채무자 보호 노력 등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비효율,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채무조정 성과 및 부실채권 정리 실적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신·기보 例)
- ② **부실채권 관리 인프라 구축** :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 운영 → 모범사례를 지속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점검  
 \* 금융위원회, 각 금융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참석 → 각 기관별 모범사례 공유, 부실채권 제도개선 진행 현황 점검, 상각채권 캠코 매각 관련 현황 점검 등
-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 시스템 구축 (캠코 주관)

### 다. 기대효과

- **(채무자)** 상환의사·능력 있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는 과도한 장기추심에 따른 부담 경감
- **(채권기관)** 상환의욕 고취를 통한 회수율 제고,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부담 완화 및 부실채권 관리 조직·인력의 핵심역량 집중
  - 향후,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비한 금융공공기관의 대응여력을 사전 확보
- **(국가·사회)** 재기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부실채권 장기·중복 관리에 따른 사회적비용 최소화 및 누증 방지로 재정부담 완화

### 라. 향후계획

- ①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각 기관별 내규개정을 '17.6월말 까지 조속히 마무리(별도의 입법조치는 불요)하여 '17.3분기 부터 시행
- ② **상각채권의 캠코 매각**은 '17.6월말 까지 매각 규모, 매각 가격 등을 각 기관간 협의하여 마련하고 '17.하반기중 1차 매각 시행
- ③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 시스템**은 '17.6월말까지 주요 통계항목 확정 → 시범 테스트 등을 거쳐 '17년말까지 구축 완료
- ④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17.2분기 중 개최하여 개선방안 추진 현황 및 상각채권 캠코 매각 현황 등 점검 (매년 2회 정기 개최)

<참고1> 기대효과 (제도개선 예상사례)

<참고2> 주요 Q&A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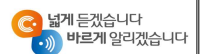
#### <금융 용어 설명>

- **부실채권**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여신기관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며, 보증기관은 연체된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보유한 구상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
- **상각채권** :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절차를 대손상각이라고 하며, 대손상각된 부실채권을 상각채권으로 분류 (금융공공기관은 통상 '특수채권'으로 표현)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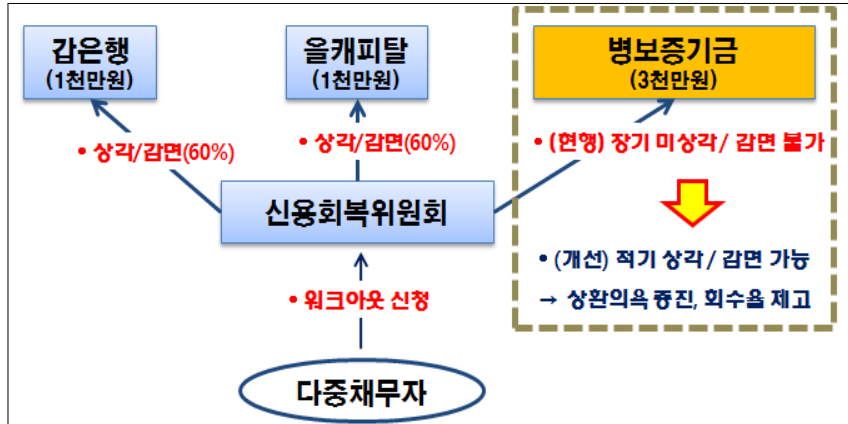


## 참고1

## 기대효과 (제도개선 예상사례)

### ① 적기 상각 → 장기·다중채무자 신복위 워크아웃 실효성 ↑

※ 상각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감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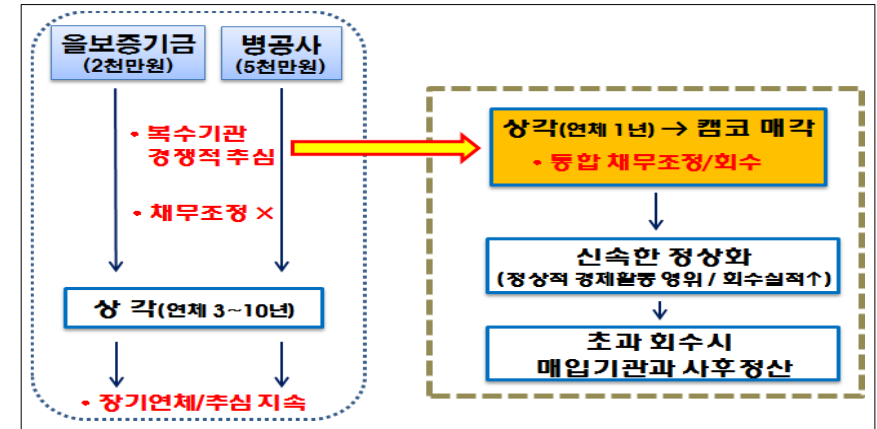
**<사례>** A씨는 갭은행(1,000만원), 을캐피탈(1,000만원), 병보증기금(3,000만원)을 통해 대출받은 5천만원을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연체 발생

임시직으로 어렵게 생활하며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3년 후 직장을 구하게 되자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상환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갭은행, 을캐피탈 채무(2,000만원)는 상각되어 60%까지 감면되는 반면, 병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채무(3,000만원)는 상각되지 않았고, 신복위에서도 상각되지 않은 채무는 원금을 감면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 A씨는 결국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8년 동안 매월 약 4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커서 상환을 포기함(→ 갭은행, 을캐피탈, 병보증기금 모두 원금 회수에 실패)

**(제도개선 이후)** 병보증기금도 일정 기간 경과된 채권은 상각함에 따라 A씨의 채무도 상각되었고 이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 채무와 동일하게 최대 6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에 A씨는 향후 8년 동안 매월 약 20만원씩 갚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하기로 결정함(→ 갭은행, 을캐피탈, 병보증기금 모두 원금 일부를 회수)

### ② 상각채권 캠프 매각 → 상각채권 관리 일원화



**<사례>** 갑카드사(2,000만원), 을보증기금(5,000만원)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창업한 B씨는 경기 악화로 부도를 맞아 폐업하면서 사업대출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병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5,000만원)도 연체하게 됨

여러 금융기관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빼 월세로 옮기면서 금리가 높은 갑카드사 대출을 우선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전세자금대출과 을보증기금 채무는 갚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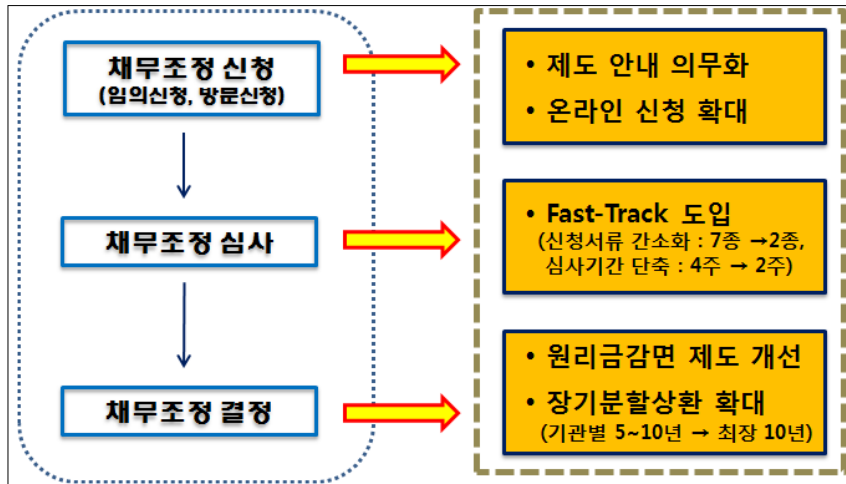
이후 직장에 취업하였으나, 얼마되지 않는 월급으로는 생활하기도 어려워 빚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하던 B씨는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알고 채무조정 받아 채무를 상환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의 반대로 채무조정에 실패하자 채무 상환을 포기하게 되었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과 경쟁적인 추심에 시달리게 됨

**(제도개선 이후)** 캠프에서 을보증기금 채무와 병공사 채무를 모두 매입하였고 이를 B씨에게 안내하였음 B씨는 캠프를 방문하여 재산현황, 소득수준, 월상환가능액 등을 토대로 총 채무 1억원의 60%인 6천만원을 감면받고 최대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하는 조정안에 따라 월 33만원 정도의 채무 상환으로 빚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음

한편, B씨의 성실상환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수금액이 늘어나자, 캠프는 을보증기금과 병공사에 배분하여 기관 수익도 개선됨



### ③ 자체 채무조정 제도 내실화 : 접근성 및 내용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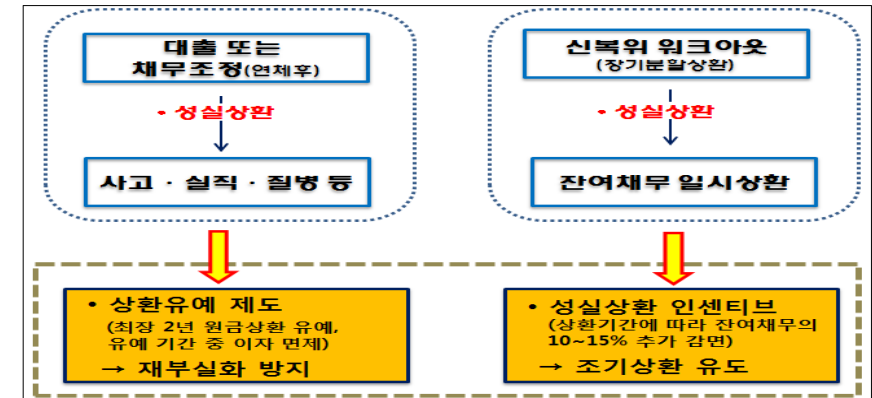
**<사례>** 개인기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창업한 C씨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갑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5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주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처하면서 이자를 장기 연체하였고 사업체는 폐업하게 되었음

이후 A씨는 지인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여유자금이 생기자 갑보증기금의 채무는 꼭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여유가 없어 해당 기관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음

**(제도개선 이후)** ①갑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감면 제도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안내문에는 채무조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②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내역 및 상환관련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 인터넷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함

한편, 과거에는 채무조정 신청시 신청서, 채무면제각서, 이행동의서, 상환 약정서, 주민등록초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일일이 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③채무조정 Fast-track제도를 통해 신청서 및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한 후 며칠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심사를 받고 ④10년간 월 40만원씩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었음

### ④ 상환유예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 도입·강화



**<사례1>** 농업인 D씨는 갑보증기금을 통해 영농자금(5,000만원)을 대출받아 특산물 농사를 하였으나, 연속되는 작황부진으로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함 농업 특성상 작황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자 D씨는 상환을 포기하게 됨 (갑보증기금은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을 보유함)

**(제도개선 이후)** D씨는 갑보증기금과 상담을 통해 장기분할상환과 일정기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아 나가기로 결정함 특히, 제도개선으로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해 보증기금은 수확시기, 판매대금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상환 유예와 이자면제를 해주었고, D씨는 농산물 판매대금 등으로 상환자금을 마련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음

**<사례2>** E씨는 폐기처리 관련 특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을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4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동업자가 사업자금 횡령 후 잠적함에 따라 원리금상환이 어려워져 사업체를 폐업

일용직을 전전하던 E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8년 동안 월 약 40만원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천만원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재개하였음

6년 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E씨는 실적 개선으로 여유자금이 생기자 남은 채무(1,000만원)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했으나, 금융회사 채무는 일시 상환시 잔여채무의 10~15% 추가 감면이 가능한 반면, 을보증기금 채무는 추가 감면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준비한 자금이 일부 부족하여 조기상환을 포기

**(제도개선 이후)** 을보증기관 채무도 일시상환할 경우 추가감면이 가능해지자 E씨는 100만원(잔여채무의 10%) 추가 감면을 적용받고 잔여채무를 일시 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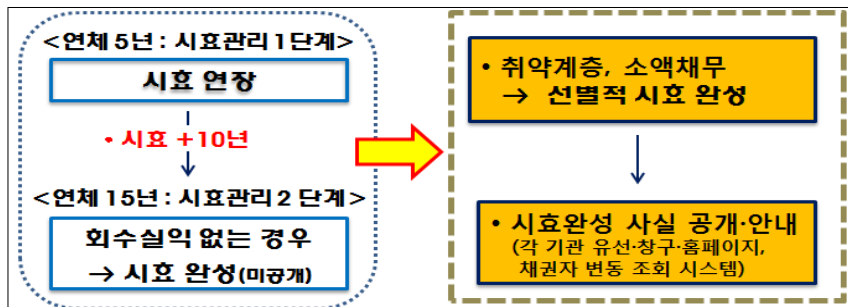
## 5 변제충당 순서 변경 : 원금부터 우선 상환

**<사례>** F씨는 갑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받아 유통업을 운영하던 중 경기악화로 1,000만원 연체. 이후 F씨는 기자재 정리로 800만원을 우선 갚고 매년 100만원씩 갚으려 하였으나, 3년간 연체이자(360만원, 12%)와 채권보전비용 30만원을 모두 갚아야 하고, 상환금이 이자(12%)가 붙어나는 원금부터 변제되지 않아, 무려 11년에 걸쳐 총 1,887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환을 포기함

**(제도개선 이후)** 상환금이 이자가 붙어나는 원금부터 우선 변제될 경우, F씨는 7년에 걸쳐 총 1,426만원을 갚으면 변제가 완료되므로, 상환하기로 결정

(단위 : 만원, 년)		D	D+1			D+6	D+7			D+10	D+11	총상환금
기 존	상환금	800	100			100	100			100	87	1,887
	원금	590	561			353	295			78	-	상환의욕 ↓
	비용-이자	-	-			-	-			-	-	
개 선	상환	800	100			100	26			-	-	1,426
	원금	200	100			-	-			-	-	상환의욕 ↑
	비용-이자	390	414			26	-			-	-	

## 6 소멸시효 관리제도 개선 : 무조건적인 시효연장 관행 개선



**<사례>** G씨(70)는 과거에 긴급 자금이 필요해 갑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원금의 절반을 상환함. 이후 G씨는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잔여대출금 500만원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짐 갑저축은행도 이후 파산하여 G씨의 채무는 을공사로 매각됨 G씨는 고령으로 더 이상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고 변제할 여력이 없어 전전긍긍함

**(제도개선 이후)** G씨는 을공사가 취약계층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선문의 하였고, 시효완성 사실을 안내 받아 빚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었음

## 참고2

## 주요 Q&A

### 1.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은?

- 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채무자에 대한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 이러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달리 채권의 유지·보전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 관리하는 경향
  - 또, 기관별로 부실채권 관리제도가 상이하여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어렵고 채무자간 형평성도 저해되는 문제
  - ⇒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이 어렵고, 관리상 비효율도 발생
-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 회수·보유에서 적극적 조정·정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① 모호한 상각기준을 구체화하여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은 적기에 상각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캠코)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
  - ② 채무조정 강화, 과잉추심 방지, 무분별한 시효연장 자체 등 각 기관에 도입된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 ③ 채권관리 직원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 병행

## 2.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기대효과는?

- 오늘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채무자-채권기관-국가·사회 모두에 이익
- ① 채무자는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으며,
  -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는 과도한 장기추심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 ② 채권기관은 채무자의 상환 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실채권 관리 조직·인력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경쟁력 제고 가능
  - 또한, 향후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비한 금융공공기관의 대응 여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음
- ③ 국가·사회적으로도 채무자 재기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으며, (선순환 구조 확립)
  - 부실채권 장기·중복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실채권 누증에 따른 장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음
- 한편,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여타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

## 3. 원금감면 관련 제도 개선은 부채 탕감 정책 아닌지?

- 원금감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현재의 원금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중인 원금감면 제도를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바탕으로 도덕적 해이 유발없이 보완한다는 의미
  - \* 주금공, 예보, 캠프는 원금감면 제도운영, 신·기보 등은 원금감면 제도 없음  
→ 채권 특성, 채무자 여건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원금감면 제도 운영
  - 특히, 금융공공기관 상각기준이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와 상이하여, 신복위 워크아웃 등 원금감면 제도 운용에 일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

### <상각기준 및 신복위 워크아웃 원금감면 적용 여부>

- 민간 금융회사 : 추정손실로 분류 → 통상 연체 1년 경과시 상각
- 금융공공기관 : 회수불가능, 채권 무효 → 연체후 상각까지 3~10년 이상 소요
- ⇒ 여러기관에 채무가 있는 연체 1년 초과된 다중채무자가 신복위 워크아웃 신청시 은행권 채권은 상각되어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금융공공기관 채권은 상각이 되지 않아 원금감면에서 제외(워크아웃 실효성 저하 및 형평성 문제)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공공기관의 상각기준, 상각채권 관리제도 등의 정비를 통해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 4.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는지?

- ☐ 금번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단순히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 감면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회수 활동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여 부실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기관별로 상이한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조정·보완하여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 ☐ 채무자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 국민들의 높은 신용 의식과 채무상환 의지 및 연체정보\* 등록 등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 연체정보는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7년간 유지
  - 그동안 공공기관이 법상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소득 정보 조회 권한을 활용하여 상환능력을 선별하는 역량도 강화
- ☐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 대출·보증 심사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피도록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는 한편,
  - 금융공공기관들이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못 갚는” 경우와 “안 갚는” 경우를 더욱 잘 선별해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

#### 5. 상각된 부실채권을 캠프에 매각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을 전문기관이 일원화하여 관리할 경우,
  - 각 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의 중복지출 억제)
  -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재기 지원이 가능함  
\* 캠프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중복비율은 약 24% 수준이며, 앞으로 매각기관을 확대할 경우 중복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캠프)
  - 또한, 매각기관은 부실채권 관리 조직·인력을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
- ☐ 캠프는 설립법률에 따라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와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으며,
  - 그동안 공공부문의 다양한 부실채권을 인수(총 14.5조원, 11.5만명)하여 관리해 온 전문성을 고려하여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역할을 부여

## 6.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25조원을 모두 캠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 25조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금융공공기관\*이 '16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실채권 규모로

\* 주금공, 신보, 기보, 농신보, 예보, 캠코

○ 동 채권이 모두 캠코에 매각되어 관리되는 것은 아님

☐ 기본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회수하고,

○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상각하고 부실채권 관리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하는 것임

☐ 다만, 상각채권 중에서도 매각 이전에 채권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상환 중인 경우 등은 캠코에 매각하지 않으며,

○ 농신보의 경우에는 채권특성(농·어민 채권) 등을 감안하여 캠코에 매각하지 않고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

☐ 향후 캠코와 각 기관은 구체적인 매각 규모 등을 협의하여 '17년 하반기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며,

○ 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은 연 1회 정기적으로 매각할 계획

## 7.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매각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닌지? ※ 저가매각 → 매각손실

☐ 각 기관별 채권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저가 매각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

① 매각대상 채권과 특성이 유사한 채권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모집단의 과거 경험회수율 등을 반영하여 매각가격을 산정

② 매각가격 결정 과정을 매각기관에서 추천한 선정위원들이 선정한 평가기관(회계법인)이 주관하므로 공정성 담보 가능

☐ 매각 후 10년 동안 매각가를 상회하는 회수실적이 발생한 경우, 초과회수금을 매각기관과 공유하므로 저가매각 우려도 적음

○ 또한, 매각가를 하회하는 회수실적으로 손실이 발생시에는 이를 캠코가 부담토록하여 매각기관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

☐ 한편, 매각기관은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뒤에는 위탁추심에 따른 수수료나 관리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8. 어차피 상각채권을 캠프에 매각하여 관리한다면 기관별로 별도의 채무조정제도 개선 등이 필요 없는 것 아닌지?**

☐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은 상각하여 캠프에 매각하게 되므로,
- 각 기관에서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캠프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제도 등에 따라 관리되는 것임

☐ 다만,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상각된 채권을 캠프에 매각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 캠프에 매각되기 이전에도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히 재기하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 자체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캠프 매각 이전에도 재기를 지원할 필요 (제도의 공백이 없도록 촘촘히 보완)
- 또한, 연체 초기에는 채무자의 신용도, 경제적 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채권기관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가능한 점도 감안

☐ 한편, 일정한 사유(채무조정 약정, 상환유예 등)로 인해 캠프에 매각하지 않는 부실채권도 있으므로

- 추심회수, 시효관리 등의 제도 개선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채무자 재기지원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